독도 수호 결의(안)

의안번호	32

제안일자 : 2008. 7. 11
제 안 자 : 거창군의회

1. 주 문

별첨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일본 정부가 2008년 7월 14일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내용의「중학교 사회과목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바, 향후 해설서는 일본 교과서의 수업지침이 될 뿐 아니라, 일본 민간 교과서를 펴내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 이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무시하고,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중학교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따라서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와 일본정부에 전달하고자 함.

3. 보낼 곳 :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일본정부

독도 수호 결의(안)

일본정부가 2008년 7월 14일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과목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7만 거창군민의 이름으로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독도는 유구한 세월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확고하므로,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권 침해 도발의도를 즉각 철회하라.

1.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이 명기 된 중학교 사회과목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즉각 백지화하고 훼손된 한·일간의 관계복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탈 의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2008. 7. 21.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